

CH4. 한반도의 도시지정학-대북전단 살포와 접경·안보의 스케일 정치

발제자께서는 “제 4장 한반도의 도시지정학”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본인의 생각을 발제문을 통해 잘 드러나게 써주셨습니다. 발제문의 요지로 네 가지 정도를 설정하고 의견을 적어주셨는데, 첫 번째로, 시대적 맥락(논문 투고 시기와 평양공동선언 시기의 영향), 두 번째로 방법론과 데이터의 한계(통계 부재), 세 번째로 서구중심주의의 비판, 마지막으로 접경지역 연구의 근본적 한계(북한)가 있었습니다. 발제자의 견해는 전반적으로 흥미롭고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토론자의 견해로는 토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부재, 방법론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발제자께서는 임진각의 예를 들며, ‘통계적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여 주관적이고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하며 주관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비판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양적 연구 논문에서 본문과 같은 기술이면 발제자께서 제시하신 비판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보일 수 있으나, 이 논문은 서론에서 연구 방법으로 ‘아카이브 연구와 반구조화 인터뷰’를 명시했습니다(129p). 일상생활의 지정학이나 안보 담론의 경합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단순한 수치의 증감보다, 행위자들(주민, 상인, 시민단체 등)이 갈등을 어떻게 체감하고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텍스트와 증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적 연구로 설계된 논문을 양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접경지역 연구의 근본적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제자께서는 ‘경계 연구는 양측을 함께 분석해야 하므로 북한 상황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문제의식은 남북한 국가 간의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파주시라는 남한 내부의 로컬 스케일에서 안보와 개발의 넥서스가 어떻게 요동치며, 비국가 행위자들로 인해 접경도시의 일상이 어떻게 지정학적 갈등에 휩싸이는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물론 북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완벽하고 설득력이 보완되는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분명히 있고 남한 접경지 내부의 공간적 역동성과 시민사회의 분열을 분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도시지정학 연구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측 데이터를 구할 수 없다는 현실을 들어 남한 내부 공간에 대한 심층 연구 자체를 한계로 규정하는 것은 재고해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